

# “그날의 정신 공론화... 일상 속 민주주의 확장”

## 제4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 내달 16~17일 금남로... ‘오월의 꽃, 오늘의 빛’ 주제 전야제·민주평화대행진...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제4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가 오는 5월 16~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론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3일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5월 한 달간 진행될 기념행사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는 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을 앞두고 ‘기억 생태계’ 구축과 미래세대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

했다. 청소년과 청년이 기획자이자 기억의 계승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헌법 전문 필사’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5월 한 달간 5·18 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개정안을 필사에 홈페이지에 공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16~17일 전일빌딩 북카페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념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16일에 집중 배치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18분까지는 1980년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가두행진을 재현한 ‘민주평



화대행진’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하는 참가자 2000여명은 광주역과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등 3개 지점에서 출발한 뒤 5·18민주광장으로 집결한다. 이후 신규 프로그램인 ‘민주의 밤’이 열려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야제는 17일 오후 5시 18분부터 7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전야제는 마당극 기법을 활용해 사회자 1인 진행 방식이 아닌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대중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치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대중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광장에는 360도 원형무대가 설치돼 옛 도청을 가렸던 단점을 보완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히고, 5·18 성폭력 피해 치유 단체 ‘5·18 열매’의 김복희 대표도 무대에 올라 연대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런(RUN) 5·18. 도청 가는 길’은 전남대에서 출발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까지 5.18km를 달려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참여형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된다.

2030 청년세대에 주목받는 ‘러닝’을 통해 전남대부터 광주역,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옛터(대안광장 교차로), 금남로, 5·18민주광장(분부대)까지 5.18km로 구성된 오월광주의 현장을 함께 달려며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16~17일 열리는 시민난장에서는 먹거리 푸드트럭을 포함해 주먹밥 나눔, 트라우마센터 심리 치유, 청소년 제작 굿즈 판매, 시민 체험부스를 즐길 수 있다.

1980년 시내버스를 재현한 ‘민주버스’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둘러보는 ‘오월 광주와 함께하는 민주버스’ 투어도 운영된다. 주요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비롯해 국군광주병원, 무등경기장, 옛 광주교도소, 5·18구묘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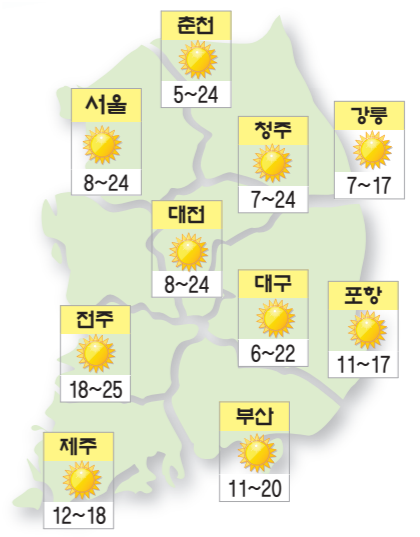
다만 행사위는 행사 기간 예고된 극우성향 단체의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는 5·18의 가치를 시민 참여 속에서 확장하고 헌법 전문 수록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준비해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50	달림	11:47
맑음	19:12	달림	01:41



광주	☀️	8~23
목포	☀️	9~21
여수	☀️	10~21
순천	☀️	7~22
구례	☀️	5~23
광주	☀️	7~22
신도	☀️	9~21
흑산도	☀️	11~16
진남	☀️	7~21
진도	☀️	11~19

목포	미물(고)	07:40 / 19:41
	샘물(저)	13:03 / --:--
여수	미물(고)	02:25 / 14:53
	샘물(저)	08:55 / 20:59

## “주소 혼선 없앤다” 광주 남구 행정구역 조정

### 5월부터...광주대·진월한국아파트 등 17만㎡ 재편

광주 남구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나선다. 광주 대학교와 진월한국아파트 아파트 일대 등 약 17만㎡ 규모로, 주민 생활 편의 개선이 핵심이다.

남구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면적은 114필지, 17만5863.5㎡에 달한다.

조정 대상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어긋나 민원이 지속돼 온 지역들이다.

이에 따라 진월한국아파트 아파트 일 부는 법정동이 송하동에서 진월동으로, 행정동도 송암동에서 진월동으로 변경된다. 광주대 부지 일부 역시 법정동은 행암

동에서 진월동으로, 행정동은 효덕동에서 진월동으로 조정된다.

푸른길 백운광장부터 남광교 일대로 조정된다. 경계가 맞지 않던 구간을 기준으로 북측 필지를 조정해 법정동은 봉선동·방림동에서 백운동·양림동으로, 행정동은 봉선1동에서 백운2동으로 바뀐다.

이번 조정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대와 진월한국아파트의 경우 단지와 캠퍼스가 서로 다른 동으로 나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컸고, 백운광장 일대 역시 생활권과 행정동이 달라 혼선이 이어져 왔다.

남구는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동구 '2026 올해의 책' 선포 '시 시대, 사람답게 선택하는 삶'을 주제로 23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에 참석한 신동하 부구청장이 어린이 등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반발 확산

### 재학생·졸업생 34명 “국가 승인 믿었는데 피해 전기” 교육당국 책임론 제기...“편입 등 구제책 실효성 없어”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생들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나섰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학습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30여명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승인한 교육과정을 믿고 수년간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며 과정을 이수했지만, 갑작스러운 자격증 발급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대학이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존 졸업생들은 이미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시점 이후 학생들에게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타 대학 편입학 등 구제 방안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학생과 졸업생 상당수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남부대 교육대

학원이 교원양성기관 승인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는 기존 미충족을 이유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후 관련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으며, 현재까지 졸업생과 재학생 34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자체적인 해결은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대학의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이를 적시에 바로잡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4년6개월 선고

### 법원 “반사회적 범죄...엄정한 처벌 불가피”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해든이)를 숨지게 한 친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응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

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도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모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노 해결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는 추모 화환들이 이어졌으며, 정문 앞 200m 가량 놓인 화환 물결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관심을 보였다. 임영진 기자 looks@

## 광주 동구 금연지도원 동행기



광주 동구와 광주금연관리지원센터는 23일 조선대학교 장미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자담배도 담배’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푸른길공원·병원 등 집중계도...오늘부터 위반 시 10만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 금연에 동참해주세요.”

23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푸른길공원 일원, ‘금연’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지도원들이 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세로 바깥을 안내하고 있었다.

공원 산책로 한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이 눈에 띄자, 김미영 동구청 금연 담당 주무관과 금연지도원이 곧바로 다가갔다.

김 주무관은 “그동안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 단속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24일부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공원이거나 버스정류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해당 남성은 “전자담배는 연초가 아니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며 “금연구역에서 안 되는지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공원 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꺼내 들던 한 시민이 ‘이 공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공원

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확인하고, 주머니 골목에 들어가 흡연한 뒤 자리를 떴다.

산책 중이던 시민들은 간간이 퍼지는 담배 연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모씨(40)는 “흡연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결국 비흡연자가 피해자가 된다”며 “단속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원들은 현장 계도와 함께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금연 지원 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후 조선대병원 인근으로 이동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상태와 흡연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흡연이 잦은 장소에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지만,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동구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41건이다.

이번 단속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추진됐다.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